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계약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침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다.

첫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노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올해 제조·금융 대기업을 필두로 민간부문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조치이기도 한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임금체계 전반을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심화하면서 임금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지배자들에게 이는 사활적인 과제다.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은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악적이다.

둘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을 성과에 따라 줄 세워 고용도 위협한다. 심각한 경영위기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해고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도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진정한 ‘저성과자’는 박근혜와 기업주들

과거에 KT, 외환·국민은행 등에서 저성과를 핑계로 직무를 빼앗고 특수 부서로 발령 내 퇴출을 압박한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그저 ‘극소수 불성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 다수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공격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

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이런 공격 중 일부는 법적 제약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지침은 바로 이런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지침 강행의 목표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려고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인건비를 줄이고 상시적 해고를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저성과자’는 수익성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주들, 감언이설 공약을 지킨 게 없는 박근혜,

그리고 위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계약은 자신들의 ‘저성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악랄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협박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법무장관 김현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ISIS 테러와 북핵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했다!), 이 투쟁이 실질적으로 조직될 때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제도 개혁을 기대하며 행정지침 철회 투쟁을 흐지부지한 채 총선 대응으로 바통을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정치투쟁에 나서지 않고 국회에 의존하려 한다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개혁을 쟁취하

기도 힘들다.

더구나 진보정치 세력이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 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총선 대응론은 더민주당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문제는 더민주당의 거듭된 배신 행위다. 노동약법 5개를 전부 반대한다더니 얼마 못 가 파견법·기간제법 등 2개만 반대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이제는 파견법도 협상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꾀죄

함은 더민주당이 포퓰리즘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들에 기반한 당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힘을 발휘해 파업에 나서야 가장 효과적으로 박근혜와 맞설 수 있고 나머지 피억압 대중도 자기 주위로 끌어당길 수 있다. 투쟁을 배제하는 ‘정치’야말로 선거 승리도 어렵게 하는 공상이다.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 투쟁이다.

추천 소책자



증보판
‘노동개혁’에 맞선 노동자 투쟁
2015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김하영 지음 | 노동자연대 |
120쪽 | 4,000원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고립시키려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피크제를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노리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 하락이다.

박근혜는 조직 노동자들은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고립시켜 공격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 방어막도 없는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공격하려 한다. ‘이간질해 각개격파하기’ 전술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부위로서 박근혜가 조직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에 강요하는 조건 악화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무기한 총파업”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비교적 빨리 지침을 내렸지만, 27일 4시간(주야2시간) 파업과 26/29일 확대간부 파업 명령에 그쳤다. 강한 조직력과 투쟁 전통이 있는 금속노조에 기대되는 바에 비춰 보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설

상가상으로, 금속노조의 현대기아차지부는 다시금 파업 지침을 축소했다. 김성락 기아차 집행부는 27일 확대간부 파업만을, 박유기 현대차 집행부는 집회 참가만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못지 않게 크고 힘 있는 노조가 많은 공공운수노조도 크게 미흡한 지침만을 내렸다. 사실상 집회 참가만 정한 셈이다. 민주노총의 나머지 가맹노조들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느 정도 저항을 했다. 지난 11월 14일 10만 민중총궐기 대회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비록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던 구상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탄력이 다소 둔화됐지만, 정부가 행정지침 발표를 강행한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현장에 파업 지침을 내린다면 그런 부문이 먼저 파업에 돌입하면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장의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그저 형식적인 몇 시간 ‘파업’이나 집회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내는 파업이 되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spaper.org>

각 사업장 별 ‘지침 무력화’로 미뤄뒀선 안 된다

노조 지도자들 상당수는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지침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대선에서 대응하자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 노조들의 당면 투쟁 계획이 충분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와 기업주가 행정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려 할 때 이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투쟁을 ‘경제주의’라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성과가 다른 사업장의 투쟁을 고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임단협 때 두고 보자며 투쟁을

미뤄뒀선 안 된다. 일부 노조들이 임단협 때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부지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소수 사업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미조직·비정규직, 취약노조 노동자들의 조건도 함께 방어하려면, 민주노총의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나서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주들이 함부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외면한 결과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 지침이 적용되고 이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으면, 결국 잘 조직된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작업장별 대응으로 투쟁을 미루고 분산시키는 것도, 또 총선에 기대는 것도(관련 글 앞면) 정부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행정지침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사용자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강력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경제적 힘을 과감하게 사용해 박근혜에 맞선다면 그의 집요한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